탄 원 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수신 대법원 귀중
사건번호 사건번호: _____ (제출 전 조회)
피고인 윤석열
탄원인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상고심에서도 충분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선거 과정의 정치적 조언과 정보 제공이 어느 경우에 정치자금법상 기부가 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명태균 씨로부터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공천 관련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7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검사는 10월 13일 상고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차의 경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자료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곧바로 재산상 이익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의 실시와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 또는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탄원은 여론조사를 둘러싼 모든 정치적 논란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법률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 분석, 조사 결과, 정보 및 소개를 받습니다. 그 모든 활동을 형사법상 금전적 가치로 환산된 기부로 간주한다면, 정치적 조언과 재산상 이익 제공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비용 부담의 약정, 제공을 요청한 사실, 대가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신중하게 살펴 주십시오.

특히 법률상 재산상 이익의 존재와 그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수수했는지의 문제는 단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과 그 비용 상당액이 특정 후보자에게 기부되었다는 결론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도 자료가 공유되었는지, 제공자의 독자적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도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천과 관련된 사정 역시 그 자체로 윤리적·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과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나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추론과 형사법상 유죄의 증명은 다르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고심의 역할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전면 심리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항소심이 적용한 법리와 판단 과정에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오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되, 이미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이유 또한 충분히 존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정치적 의혹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기부 및 수수의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피고인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인 _____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귀중